

# 공공 데이터 개방 - 정부 3.0 로드맵과 빅 데이터

김 우 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beladomo@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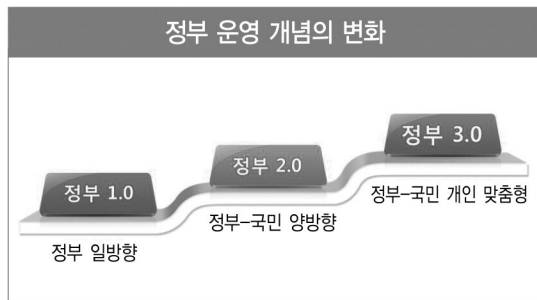
## 정부 3.0의 배경

**우** 리나라는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의 최빈국에서 1995년 1만 달러의 중진국으로 도약했고, 2010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해 국가경쟁력 20위 국가로 도약하였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성숙도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생산 인구(15~64세)가 감소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성장률(매년 6% 이상)을 달성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반면에 IT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면서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글로벌 기업을 선점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

굴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과 기반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sup>1)</sup> 최근의 정부 개혁은 웹1.0, 2.0, 3.0과 같은 IT 분야의 발전 단계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웹 1.0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소비자가 접근하는 방식이었고, 웹2.0이 소비자가 프로슈머(prosumer)로서 생산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웹3.0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1)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스마트정부 (Gov3.0)포럼.

## 특집 **건설산업, 빅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라**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 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 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 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제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웹의 발전 단계가 정부 개혁의 아젠다(agenda)로 적용된 것이 정부 2.0과 정부 3.0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1.0이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친 반면, 정부 2.0은 웹2.0 기반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부처간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 정보와 다양한 민간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3.0을 기반으로 한 정부 3.0은 모든 정부 서비스를 개인의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개인화·지능화하여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 웹 공간의 개인화를 통해 시간 및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단절 없는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sup>2)</sup>

### 정부 3.0의 개요

정부 3.0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국정 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 혁신 추진 체계이다. 그 전략으로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이 3가지 전략 아래에 “공공 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정부 내 칸막이 해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등 10개의 이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과 공공 정보를



2)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 및 변화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pp.6~8.

정부 3.0 전략	
전략	이행 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li> <li>-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li> <li>- 민관 협치 강화</li> </ul>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내 칸막이 해소</li> <li>-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li> <li>-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li> </ul>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li> <li>-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li> <li>- 정보 취약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li>-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li> </ul>

공개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민·관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정책 및 행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정부 부처간의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과 연계하여 집단 지성을 통한 정책 품질을 제고하며, 국가 지식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부처간 시스템 연계, 창구 일원화 등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규제 개선, 정보·시스템 연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센터 및 복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정보 취약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며, 유비쿼터스 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

하는 것이다.

### 건설산업과 정부 3.0, 그리고 빅데이터

정부 3.0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정부기관들만이 개별적으로 소유 하던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융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는 시대적인 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국가보다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하며, 공개된 정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정보 처리 능력, 공개된 정보를 특정 이익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오용하는 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국민 의식,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타 부처와 협력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식 변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특집 **건설산업, 빅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라**

그렇지 않다면 전시성의 형식화된 정부 3.0이 될 것이기에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의식 변화를 추구해야 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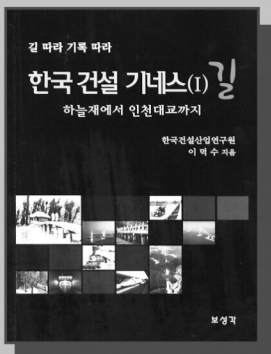
건설산업 관점에서 정부 3.0으로의 변화는 환영할 만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공개하는 공공 데이터들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공공 정책, 재정 등으로 건설과 관련된 정보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하여 건설 정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보다 객관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건설 인프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수요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기업 관점으로 보면 공공사업의 입·낙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낙찰가 예측이나 공공사업 참여, 국유재산 구매 참여, 국가 재정 지출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설 정책과 제도는 해당 부처의 벽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 기획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 3.0을 통하여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연도별 예산 중심으로 건설사업이 관리됨으로써 공정과 원가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저급한 사업관리 체계를 유도해 온 현재의 제도와 발주자의 관리 능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학 공식처럼 짜이고 발주 시점의 성과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현재의 발주제도 등을 사업 성과 중심으로 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 3.0은 일반 시민과 중소기업 창업 기업들,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 분야의 산업에 대한 고민은 담겨 있으나, 건설산업과 같은 기존 산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시된 공공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우선 건설 분야에서의 용도를 빅 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한 공개 범위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 3.0은 건설산업도 기존과는 다른 많은 기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 3.0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화된 제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CERIK



### 도·서·안·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림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표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 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